

軍부대 이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50년 간 무상 주둔

올 연말이면 무등산 정상에 50년째 주둔 중인 공군부대가 최대 5년간의 부지 사용허가를 연장받게 된다.

군부대 이전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된 가운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부지 사용허가 연장에 앞서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군부대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 등 정부부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역할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따르면, 무등산에 주둔 중인 공군 제 8331부대(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4조·세입)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은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의 국유재산의 처분 대금과 위약금, 연체료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등으로 극히 제한된 예산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부대 이전을 위한 비용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등산 공군부대는 국방부 소유 토지가 아닌 광주시, 전남도, 화순군 등 공유지와 사유지(사찰)에 주둔 중인 탓에 해당 부대가 이전하더라도 매각할 부지나 자산이 없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국방부도 동의...이전협의체 가동

권 의원 측은 의원 입법 방식이 아닌 정부 입법의 방식으로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기술 발달과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으로 무등산 정상



45년여 만에 무등산 정상 첫 개방 행사가 열린 지난 2011년 5월 14일. 수많은 시민들이 서석대에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 1966년부터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등 정상 3개 봉우리에 걸쳐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무등산 정상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국방부 땅 아닌 지자체 공유지와 사유지에 주둔 공군부대, 올 연말 부지 사용허가 최대 5년 연장 추진 국방기술·무기 발달로 정상 아니어도 국토방위 가능 예산확보·관련법 개정엔 정치권·시민도 역할 모아야

주둔지로 고집하지 않아도 국토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도 군부대 이전에 큰 틀에서 동의한 만큼, 부대 이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등산 공군부대 부지 사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만큼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예산 확보 방안과 이전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무등산 정상복원시민모임 등 환경단체도 부대 이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

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5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무등산을 무상으로 군부대에 내어 준 만큼 국방부가 더 이상 지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부대 이전 예산 수립을 위한 법률 개정과 대체 부지 마련에 나서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군 당국이 무등산 공군 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면 부대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이전 시기, 대체 부지 마련 및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 등 구체적인 부대 이전 계획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등 지역민들의 바람을 적극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무등산 정상복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 50년간 광주시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무등산 정상을 가까이 내줬다. 올 연말로 예정된 부지사용 허가 기간 연장 이전에 국방부가 시민들에게 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광주시,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군부대 이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부대이전 예산 500억 필요

한편 권은희 의원은 9월 초까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부), 광주시와 함께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 검토 협의체”를 꾸리고 부대 이전을 위한 실무 회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에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전 대상지 일부를 둘러보고 작전성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천안함’ 책임있는 조치에 5·24 조치 해제 달렸다

통일부 입장 재확인, 남북 당국회담 준비작업 착수

정부는 26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향후 남북회담에서 5·24 조치가 다루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측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써 다루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와 연계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회담에서 다루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한 ‘책임있는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앞으로 당국회담은 언제, 어떤 급으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미래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이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공감한 당국 회담의 정례화와 관련, 남북 회담의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총리급 회담 밑으로 통일부와 국방부 등의 장관급 회담과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남북 회담 체계가 가동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회담 체계가 무너졌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준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남북고위급접촉) 공동 보도문이기 기준이 된다”며 “당국 회담, 적십자 실무접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일일이 예단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회담과 민간교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이고 정부는 일관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첫 손님은 ‘소외계층’

내달 4일 다문화가족 등 초청

3일엔 문광부장관 참석 전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9월 4일 개관 첫 손님으로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한다.

방선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26일 언론 간담회를 열고 “문화전당 개관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소외계층 등을 초청해 문화전당을 소개하는 투어 등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 직무대리는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문화전당이 지향하는 ‘문화나눔과 향유’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족은 문화전당의 특별한 손님이다. ‘아시아문화교류의 허브’를 표방하고 있는 문화전당에서는 광주·전남 다

문화가정은 든든한 인적자산이다. 문화전당은 이들이 문화전당에서 고국의 문화를 접하고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교류대사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9월 3일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문화전당 개관 전야제(시민과 함께 하는 무도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무용을 배워 함께 춤추는 무도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금) 문의 (062) 605-1114



누구와도 닮지말라.
The CLA-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 CLA 200 CDI 2.143cc 1,560kg, 7G-DCT 배합연비 18.0km/ℓ (도시연비: 15.5km/ℓ, 고속도로연비: 22.5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 CLA 250 4MATIC 1,991cc 1,530kg, 7G-DCT 배합연비 11.3km/ℓ (도시연비: 9.9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56g/km
• CLA 45 AMG 4MATIC 1,991cc 1,630kg, AMG SPEEDSHIFT DCT 7speed 배합연비 10.6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